

##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이 강 국\*

### 논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에 관한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판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는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기존 연구결과가 물가지수와 실질화 방식의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2000-2017년 기간 중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난다. 결국 1997년 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상승보다 낮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정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에 관해 검토하고 앞으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주제어: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D33, E24, E25

투고 일자: 2019. 6. 17. 심사 및 수정 일자: 2019. 7. 10. 게재 확정 일자: 2019. 7. 17.

\*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e-mail: leekkk@cc.ritsumeit.ac.jp

## I. 서론

2000년 이후 한국경제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는가?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노동생산성의 상승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이 낮았기 때문에 두 변수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박종규, 2013; 김유선, 2015). 따라서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했고 이것이 소비와 총수요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되었다(홍장표, 2014a, 2014b; 전수민·주상영, 2016). 임금과 가계소득을 높여서 성장을 촉진하자는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정수(2019)는 기존 연구결과가 서로 다른 물가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이를 교정하면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들에 기초하여 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많이 상승했고, 국민경제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도 자영업 부문의 축소와 관련이 크다고 주장한다. 즉 소득주도성장의 논리적 기초가 되었던 연구결과들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상영·전수민(2019), 김유선(2019) 등은 박정수(2019)의 결과가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제기했고, 이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둘러싸고 논쟁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기능적 분배라는 중요한 주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한국 경제학계에서 보기 드문 논쟁을 촉발했다는 점은 박정수(2019)의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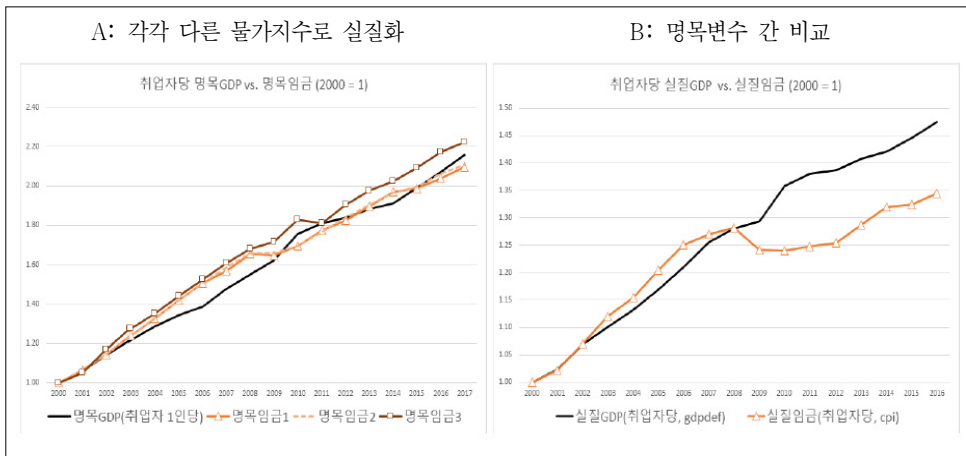
본 연구는 박정수(2019)의 분석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와 함께 추가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여러 논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하게, 그가 사용한 임금통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거시경제의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고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 본 연구는 또한 그래프의 기준 연도 문제, 물가지수의 문제, 그리고 임금불평등 심화 등에 관한 논의들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국내외의 연구들을 소개하며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논쟁을 검토한다. 특히 자영업의 소득을 보정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둘러싼 쟁점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과 영향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앞으로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연구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것이다.

## II.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한 비판적 논의

박정수(2019)에 따르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변수의 실질화에 사용된 물가지수의 차이 때문이다. 이 연구들은 실질GDP/취업자로 정의되는 노동생산성의 계산에는 GDP 디플레이터를 쓰고 실질임금 계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사용했다. 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통계 해석상의 심각한 오류를 유발한다. 실제로 <그림 1>이 보여주듯 명목변수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해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명목GDP/취업자수로 계산된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림 1> 취업자당 GDP와 임금의 비교



자료: 박정수(2019), p. 91.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박정수(2019)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분석결과와 논의를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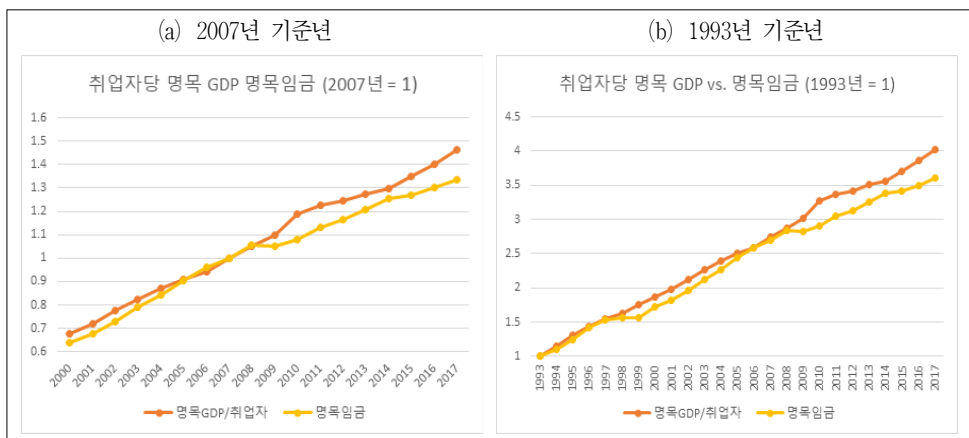
### 1. 기준 연도와 물가지수

<그림 1>에서 박정수(2019)는 2000년을 기준년으로 하여 2017년까지 명목노동생

산성과 명목임금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물가지수의 차이가 없는 명목변수들 사이에는 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연도의 수치를 1로 하고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방법은 기준 연도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sup>1)</sup> 〈그림 2〉의 (a)가 보여주듯 명목변수를 사용하더라도 2007년을 기준년으로 하면 그 이후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상승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괴리가 나타난다. 그들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분석해도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두 변수 간에 괴리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특히 2000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일종의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임금상승이 둔화되어 2000년에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그 이후의 시기에는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가 시작되기 전인 외환위기 이전의 자료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의 (b)는 1993년부터 분석해보면 1997년 이후 2017년까지 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기에 노동생산성의 상승과 비교하여 명목임금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특정 연도를 기준년으로 하는 분석은 대상으로 하는 시기와 시작 연도의 설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서로 다른 기준연도의 효과



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사용.

1) 원래 박종규(2013)의 그래프는 2007년이 기준년이고 1993년에서 2012년까지 분석했다. (박종규, 2013, p. 32)

한편 박정수(2019)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서로 다른 물가지수의 차이가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비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sup>2)</sup> 따라서 Bivens and Mishel(2015), Stansbury and Summers(2018) 등은 서로 다른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실질임금의 변화를 노동생산성과 비교하여 보여준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임금을 측정하면 1973년 이후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크게 나타나지만,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임금을 측정하면 차이가 훨씬 작고 2000년대 이후에야 괴리가 나타난다. 그들의 분석에서 순노동생산성과 생산자물가로 측정한 임금 사이의 차이는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효과이며, 생산자물가로 측정한 임금과 소비자물가로 측정한 임금 사이의 차이는 교역조건(terms of trade) 효과를 나타낸다. 미국에서도 최근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하여 교역조건 효과가 컸다.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교역조건 효과가 커진 것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자본재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Karabarabounis and Neiman, 2014).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지만, 임금의 실질구매력으로 측정되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될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물가지수들의 차이가 큰 경우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를 사용한 실질임금을 노동생산성과 비교하고 교역조건 효과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실을 더욱 잘 보여주는 실질임금의 계산을 위한 더 나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개발과 한국에서도 최근 커지고 있는 교역조건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비교에는 거시경제 전체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임금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임금통계의 문제: 국민계정에 기초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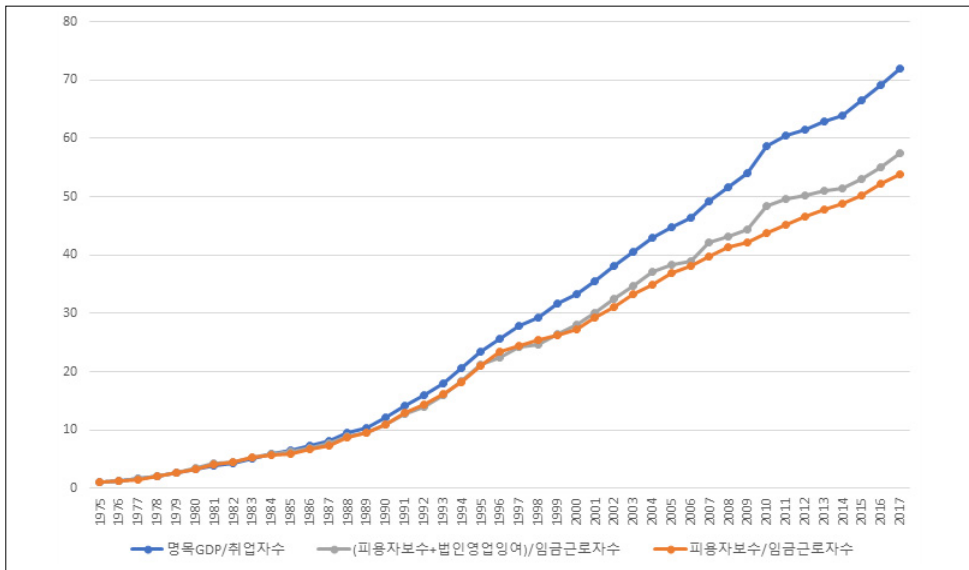
박정수(2019)의 결론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통계에 있다. 그의 연구에서 노동생산

2) 박정수(2019)도 Bosworth and Perry(1994)를 인용하며 미국도 실질임금 계산에 생산자물가를 쓰면 노동생산성-실질임금 괴리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고한다. 그들의 연구는 소비자물가지수(CIP)가 주택의 주거비용 계산에서 모기지금리 수준을 과도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임금 계산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관될 것이라 주장한다. Lawrence(2016)도 물가지수의 차이가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의 중요한 요인이며 실질임금 계산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성은 국민계정에 기초하여 GDP/취업자수로 계산했지만 임금은 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박종규(2013)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노동생산성은 거시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임금은 그렇지 않다.<sup>3)</sup> 주상영·전수민(2019)과 김유선(2019)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들은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와 달리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임금 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장기적인 임금통계는 사용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를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그림 3>과 같다. 이 비교는 명목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지수의 차

<그림 3>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1975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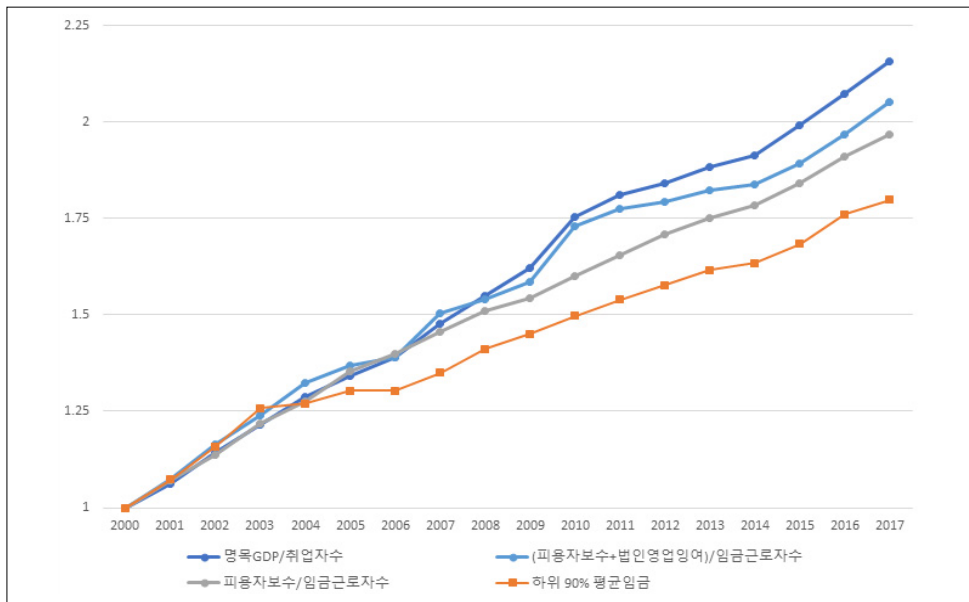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3)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임금근로자수는 약 1610만 명이고 총취업자수는 약 2356만 명인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5인 이상 상용노동자 수는 약 693만 명이고 사업체노동력조사의 5인 이상 상용노동자 수는 약 681만 명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임금근로자수는 약 1993만 명이고 총취업자수는 약 2673만 명인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5인 이상 상용노동자 수는 약 1035만 명이다.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75년부터 시작되는 장기적인 변화를 보면 두 변수 사이에 괴리가 뚜렷이 나타나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괴리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2000년을 기준 연도로 하면 외환위기 직후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림 4>가 보여주듯 2000년 이후만 분석해도 노동생산성-임금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임금통계를 사용한 박정수(2019)의 결과와 이 결과의 차이는 임금통계가 보여주는 임금 상승에 비해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 수로 계산된 임금 상승이 낮았기 때문이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을 기준 연도로 하여 분석해보면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더욱 커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0년 시기에 노동생산성 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2000년=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홍민기(2015).

하지만 명목GDP/취업자수로 계산된 명목노동생산성에는 자영업 부문 비임금근로자들의 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박정수(2019)도 이러한 이유로 두 지표의 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한다(p. 87). 그러나 명목GDP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를 제외한 값을 임금근로자수로 나눈 값을 노동생

산성 지표로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난다. 또한 주상영·전수민(2019)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보정한 명목보정임금과 명목생산성을 비교하는데 역시 2000년 이후 두 변수 사이에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sup>4)</sup>

명목GDP/취업자수로 계산한 명목노동생산성의 또 다른 문제는 감가상각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 감가상각분을 자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외의 연구들은 흔히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을 노동생산성의 지표로 사용한다. 한국에서도 국민계정의 고정자본소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왔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의 괴리가 확대된 한 요인이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의 분석을 위해서는 명목GDP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net productivity)과 임금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 부문을 제외하고 국민계정에서 법인부문만을 고려하여 순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를 분석할 수 있다. 즉 법인부문의 순부가가치 개념인 (피용자보수 + 법인영업잉여)/임금근로자수로 순노동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로 계산한 임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주상영·전수민(2019)과 김유선(2019)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림 3과 4〉는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명목노동생산성을 사용한 경우보다 더 작고 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소득에서 감가상각분인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도 역시 1997년 이후 괴리가 뚜렷이 나타나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분석결과는 국민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을 계산하는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 상응한다. 〈그림 6〉에서 제시하는 보정노동소득분배율<sup>2</sup>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법인부문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비율로 동일하게 분할하기 때문에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 즉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 + 법인영업잉여)와 동일하다. 〈그림 6〉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정노동소득분배율<sup>2</sup>의 뚜렷한 하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그림 3과 4〉에서 보이는 순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를 반영한 것이다.<sup>5)</sup> 미국도 순노동생산성과 생산자물가지수로 측정한 실질임금 사이

4) 주상영·전수민(2019)이 사용한 명목보정임금A는 (피용자보수 + 자영업의 영업잉여)/총취업자수이고 명목보정임금B는 (피용자보수 + 자영업 영업잉여의 노동소득 보정분)/총취업자수다.

5) 피용자보수를  $W(t)$ 라 하고 감가상각을 제외한 법인부문의 (영업잉여 + 피용자보수)를  $Y(t)$ 라 할



의 괴리는 명목노동생산성을 사용한 경우와 달리 2000년대 이후에야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미국의 순노동소득분배율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으며 2000년대 이후 뚜렷이 하락했다(Bridgman, 2018).

결국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에 기초하여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을 비교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괴리가 확대되었고 2000년 이후에도 괴리가 나타났다.<sup>6)</sup> 이는 주상영·전수민(2019)과 김유선(2019)이 보고하는 바와 동일하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부가가치로 측정된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임금과의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났다. 박정수(2019)의 결론과는 달리 거시경제 전체를 분석하면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의 상승에 비해 임금상승이 모자랐고, 따라서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의 몫도 하락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기업체나 사업체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박정수(2019)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기초하여 기업체의 부가가치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고,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사용하여 2010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당 명목노동생산성에 비해 명목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보고한다. 그의 지적대로 동일한 통계자료 내에서 노동생산성과 인건비 변수가 제공되는 미시자료를 사용한 분석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적인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인 조사자료들도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sup>7)</sup> 실제로 전수민·주상영(2015)은 국민계

때, 시간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frac{W}{Y}$ 의 변화는  $\frac{d(\frac{W(t)}{Y(t)})}{dt} = \frac{(\frac{dW(t)}{dt})}{Y(t)} - \frac{W(t)(\frac{dY(t)}{dt})}{Y(t)^2}$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frac{dW(t)}{W(t)} > \frac{dY(t)}{Y(t)}$  라면  $\frac{d(\frac{W(t)}{Y(t)})}{dt} > 0$  이 된다.

즉 피용자보수의 증가율이 (피용자보수 + 법인영업잉여)의 증가율보다 높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아지게 된다. 임금근로자수는 동일하므로 임금근로자 1인당 피용자보수와 순노동생산성의 비교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1997년 이후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의 증가율이 (피용자보수 + 법인영업잉여)/임금근로자수의 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이다.

6) 박정수(2019)는 명목임금2는 2006년까지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을 사용했고 이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1인 이상 전체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사용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2006년 이전에는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7)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업체가 대상이며 사업체수는 69790개, 종사자수는 296만 8천 명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광공업 취업자는 약 458만 9천 명, 제조업 취업자는 약 456만 6천 명이다.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수는

정에 기초하여 제조업에서도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이 1997년 이후 하락했다고 보고한다. 한편 거시경제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는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기업 수준에서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미시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이러한 거시적 변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 3. 임금불평등과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괴리를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금은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변화는 임금불평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논의에서도 평균임금만이 아니라 중위임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임금불평등의 확대가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에 미치는 효과는 박정수(2019)의 논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져 온 한국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다.

실제로 해외의 연구들은 노동생산성과 중위임금 혹은 노동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typical) 노동자로 불리는 비관리직/생산직 (non-supervisory/productive) 노동자의 임금을 흔히 비교한다(Bivens and Mishel, 2015; Stansbury and Summers, 2018). 미국에서는 1973년 이후 임금불평등의 확대로 인해 평균임금에 비해 중위임금이나 비관리직/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크게 정체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과의 괴리가 매우 커진다. 이를 근거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보통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이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임금불평등이 확대되어 평균임금에 비해 중위임금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고, 따라서 중위임금과 노동생산성 사이의 괴리가 평균임금을 사용할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OECD (2018)는 1995년에서 2015년 사이의 OECD 각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평균임금, 실질중위임금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실질임금 계산에 생산자물가를 사용하여 물가지수의 차이로 인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에서 2013년 사이에 폴란드를 제외하고 OECD 국가들 중

---

약 402만 개, 종사자수는 2159만 명이며, 제조업 사업체수는 43만 4천 개, 종사자수는 411만 6천 명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은 광업제조업조사보다 대상범위가 넓지만, 여전히 전체 경제를 포괄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에서 노동생산성과 평균임금, 그리고 노동생산성과 중위임금 간의 괴리가 가장 컸다(OECD, 2018, p. 56). 특히 임금불평등 확대로 인해 평균임금에 비해 중위임금 상승이 낮아서 노동생산성과 중위임금 사이의 괴리가 노동생산성과 평균임금 사이의 괴리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한국의 임금통계는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전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소득분배를 분석하는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것이다. 홍민기(2015)는 근로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상위 1%와 10%의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가 보고하는 하위 90%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여 하위 90%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변화를 분석해볼 수 있다. 〈그림 4〉는 추가적으로 2000년 이후 하위 90% 노동자 평균임금의 변화를 노동생산성과 비교해서 보여준다. 이 분석결과는 임금불평등 심화로 인해 하위 90% 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괴리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결국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고소득층 노동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해 더욱 느리게 상승했던 것이다.

### Ⅲ.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논의

####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과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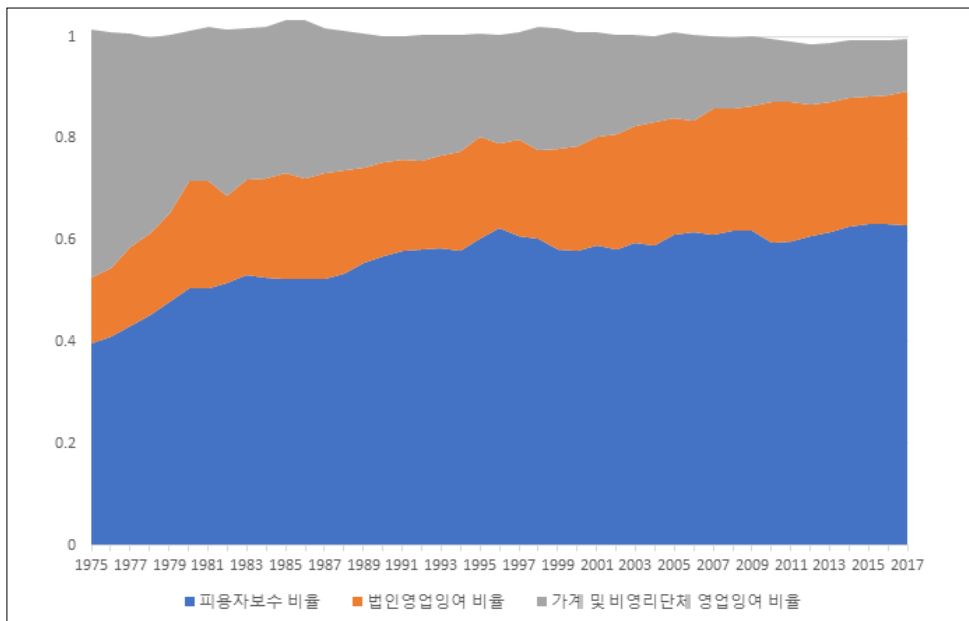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문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생산성, 즉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임금 괴리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문제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논리이므로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분석은 한국 경제학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국민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OSPUE: operating surplus of private unincorporated enterprises)를 어

8) 노동생산성-임금 괴리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도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2019. 5. 13, “노동자가 경제성장 과실 덜 받는다며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였는데...” 참조).

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 불리는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구성된다.<sup>9)</sup>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소득 전체, 즉 가게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를 모두 자본소득에 포함한다. 그러나 <그림 5>가 보여주듯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가게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의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된다. 한국에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고 그들의 소득이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은 비현실적이다.

<그림 5>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 세 구성요소의 합이 정확하게 1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각주 14를 참조.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9) 최근 한국은행 (2019)은 2015년을 기준년으로 한 새로운 국민계정 자료에 가게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의 하위항목으로 혼합소득을 새롭게 보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존의 가게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거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영업잉여를 포함했다. 이는 자가주택 소유자의 귀속지대(imputed rent)를 의미하는데 이를 제외한 가게의 혼합소득은 2017년 약 67조 원으로 가게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약 118조 원의 약 57% 수준이다. 앞으로 이 가게의 혼합소득만을 자영업자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Piketty (2014)와 Piketty and Zucman (2014)은 귀속지대를 자본소득에 포함하여 자본소득분배율을 계산한다. 하지만 가게의 혼합소득을 비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해 매우 낮아서, 더욱 정확한 통계의 산출과 자영업자 소득을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적절하게 분할하여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고, 이를 보정노동소득분배율(adjusted labor share)이라 부른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제시된 바 있다(Guerriero, 2019). Gollin(2002)은 먼저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동소득으로 생각하는 보정노동소득분배율<sup>1)</sup>을 제시한다. 하지만, 크지는 않겠지만 자영업 소득의 일부는 그들의 자본투자에 대한 이득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방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인 노동소득분배율<sup>2)</sup>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경제의 다른 부분의 노동/자본소득 비율과 같은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를 분자와 분모에서 빼고 법인부분의 노동소득분배율만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며, 법인부분과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동일하게 된다. 세 번째 보정방법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OECD와 ILO 등의 국제기구들이 이런 방법으로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한다(ILO, 2010; ILO-OECD, 2015).<sup>10)</sup>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이 방식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평가하게 된다.<sup>11)</sup>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여러 방법들 중 보정노동소득분배율<sup>2)</sup>가 가장 적절하다고 지적한다(이병희, 2015; 전수민·주상영, 2016). Piketty(2014) 등의 해외 연구도 이 방법을 사용하며, Gomme and Rupert(2004), Elsby et al. (2013) 등도 이 보정방법을 지지한다. 한편 몇몇 연구들은 자영업자 소득이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 부문만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한다(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Bridgman, 2019). 이는 결국 경제 전체로 보면 보정노동소득분배율<sup>2)</sup>의 측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10) 이는 OECD의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AMECO(Annual Macro-Economic Deatabase of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데이터베이스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보고한다. 미국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가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

11) 이러한 가정을 사용하면 1980년대 초반 요소비용국민소득 대비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이 100%가 넘는 시기가 나타나는 모순이 발생한다(이병희, 2015). 또한 자영업 영업잉여 중 노동소득 분배분의 비중이 1991년 약 141%에서 2017년 205%가 되고 자본소득은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

12) Cho et al. (2017)은 드물게도 여러 방법들 중에서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라고 가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경우 가계의 영업잉여 중 자본소득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다. 그러나 분모를 요소비용국민소득으로 하여 이렇게 계산해도 여전히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80.4%에서 2017년 약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는 분모에도 차이가 있다. OECD 등의 국제기구나 몇몇 연구들은 분모에 총부가가치나 명목GDP를 사용한다. 이를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을 비교하는 분석과 개념적으로 상응한다. 앞서 보았듯이 한국은 1997년 이후 두 변수 간의 괴리가 커졌고, 따라서 이렇게 측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하락했다(주상영·전수민, 2019, p.8.).<sup>13)</sup> 그러나 이 경우 고정자본 소모, 즉 자본의 감가상각분이 자본소득으로 간주되는데 감가상각을 자본소득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최근 국민계정에서 고정자본 소모분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은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 Bridgman (2019)은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서 분모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국민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며 이 경우 미국에서도 그 하락폭이 더 작다고 보고한다. 이를 고려하면 분모에는 고정자본 소모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피용자보수와 법인 그리고 가계의 영업잉여로 구성되는 요소비용국민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요소비용국민소득을 분모로 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sup>2)</sup>는 앞서 살펴본 법인부문의 순부가가치로 측정된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하는 분석과 개념적으로 상응한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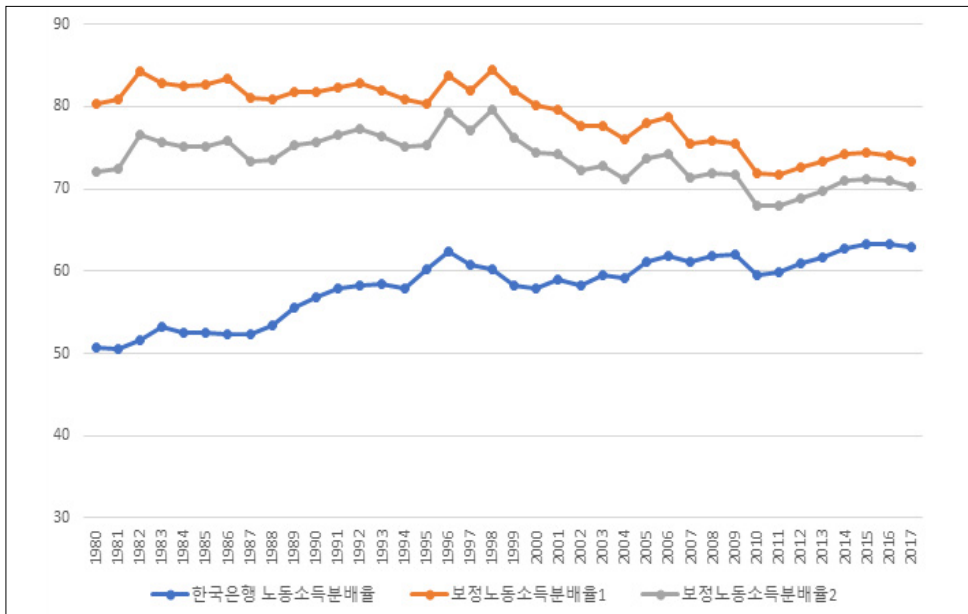
〈그림 6〉은 요소비용국민소득을 분모로 하여 측정된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보정노동소득분배율 1과 2를 함께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3%로 안정적이지만, 보정노동소득분배율 1은 1996년 83.7%에서 2017년 73.4%로 보정노동소득분배율 2는 1996년 79.3%에서 2017년 70.3%로 하락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와 비교하여 피용자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동시에 자영업자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은 모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인 1999-2000년에 급락했고 2004

73.7%로 하락한다. 한편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이 1991년 약 70%에서 2017년 약 103%까지 높아진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 13) Chen et al. (2017)은 기업부문의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기업저축의 비중이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한다. 기업저축의 증가는 기업 부문에서 피용자보수와 비교하여 영업잉여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그들의 연구는 특히 한국이 기업저축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 14) 피용자보수와 법인의 영업잉여 그리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의 합은 요소비용국민소득과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추가적으로 정부의 영업잉여와 국외순취 피용자보수, 그리고 국외순취 기업 및 재산소득이 요소비용국민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비중은 매우 작아서 보정노동소득분배율<sup>2)</sup>는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 + 법인의 영업잉여)와 거의 동일하다.

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급락했다가 이후 약간 회복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순노동생산성-임금 사이의 괴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6〉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 노동소득분배율을 둘러싼 논쟁과 연구의 발전 방향

박정수(2019)는 이러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그는 먼저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에 고용된 고용원의 피용자보수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로 보정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을 제시한다.<sup>15)</sup> 그는 이 추가로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이 기존의 보정노동소득분배율보다 덜 하락했다고 지

15) 이 방법은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자영업 이익을 제외한 분모를 사용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2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을 평균 3.8인, 이들의 보수가 평균 임금근로자의 50%라고 가정한 후 이를 분자와 분모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용원도 임금근로자인데 그들의 임금소득을 피용자보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박정수 교수의 2019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III의 발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 현황과 이슈’를 참조.

적하지만, 여전히 이 지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박정수(2019)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 감소에도 경제 발전에 따른 자영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을 배경으로 나타난 자영업자 소득의 감소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요소비용국민소득의 구성을 보면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높아졌고, 자영업자의 소득 비중이 크게 낮아졌으며 그것이 법인의 영업잉여 증가로 상쇄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도 자영업 이익 감소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중앙일보, 2019. 5. 13).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의 감소 자체는 보정노동소득분배율2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든 작든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동일한 비율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2의 하락은 법인부문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기업의 이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던 현실을 반영할 뿐이다. 또한 그의 주장과는 달리 자영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이 보정노동소득분배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sup>17)</sup>

그러나 정확하게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해야 한다는 그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가 보정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1인당 노동소득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배율로 보정하는 방법은 자영업 소득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계속 높아져 왔기 때문에 자영업의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자영업 소득을 다른 부문과 같은 비율 등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18)</sup>

16) 그는 또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이 노동소득분배율이 1에 가까울 정부부문의 피용자보수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취업자수의 변화와 그들의 소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17) 만약 기존의 자영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면 이전에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합된 것으로 생각되던 자영업자의 소득 전부가 자본소득인 법인의 영업잉여로 변화되어 보정노동소득분배율2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5인 미만 소규모 법인의 수가 약 20만 개 증가했다고 보고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법인으로 변화했는지는 모호하다. 또한 요소비용국민소득, 법인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의 규모, 그리고 자영업자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법인으로의 변화가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18) 홍장표(2014a)는 이러한 방식은 자영업 부문이 보다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과소추계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영업의 1인당 소득이 임금근로자 1인당 피용자보수보다 높으면 OECD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영업 소득을 모두 노동



Gollin (2002)은 자영업자들의 임금소득은 그들의 경제활동 부문, 교육, 성별 등 개인적 특성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Young (1995)은 동아시아 4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하는 연구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했다. 최근에는 ILO도 기존의 방법이 각국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시자료에 기초한 개선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영업의 소득을 보정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19)</sup> 이와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에서도 더욱 정확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위한 노력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적절하게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외에서는 관련 연구와 논쟁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ILO-OECD, 2015; 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여러 연구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요인들로 기술변화와 세계화, 독점 그리고 역관계의 변화 등을 지적한다. Piketty (2014)와 Piketty and Zucman (2014), 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Schwellnus et al. (2018) 등은 기술혁신으로 자본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했고 노동자의 대체가능성이 높아져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고 주장한다.<sup>20)</sup> 한편 Lee (2016)와 Piketty (2017)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Blanchard and Giavazzi (2003), Kristal (2010)도 노동자들의 협상력 약화를 강조한다. 반면 Elsbey et al. (2013)은 세계화 요인을 강조하고, 다른 실증연구들도 기술혁신과 세계화, 금융화 등 여러 요인들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다(Dao et al., 2017; Stockhammer, 2013). 보다 최근에는 산업집중도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Autor et al., 2017; Barkai, 2016).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Kim (2016)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하

소득으로 간주하는 보정방식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보정노동소득분배율<sup>2</sup>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19) ILO와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Roger Gomis 교수와의 개인적 연락에 기초함.

20) 그러나 Rognlie (2015)는 이들의 연구가 너무 높은 대체탄력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주택부문을 제외하면 자본소득비율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최근 Acemoglu and Restrepo (2019)는 직무(task)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틀에 기초하여 기술혁신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과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주목할 만하다.

락이 산업집중도의 상승과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때문이라는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이와 함께 세계화와 제조업 고용비중 하락,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노동 시장 변화 등 제도적, 정치적 요인을 포괄하는 연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tiglitz (2015)가 강조하듯 부동산 부문이나 독점 등 비생산적 지대(rent)의 영향에 관한 분석도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여러 실증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소비와 총수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홍장표, 2014a, 2014b; 전수민·주상영, 2016; 정상준, 2017).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에는 내생성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논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sup>21)</sup> 앞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엄밀한 연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문제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게 된 주요한 배경은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괴리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소비와 총수요의 둔화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수(2019)는 몇몇 연구들이 보고하는 2000년 이후 실질임금상승률과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 사이의 괴리는 서로 다른 물가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명목변수나 동일한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괴리가 사라진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기존 연구결과들이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의 실질화 방식에 관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물가지수의 차이를 교정하면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임금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의 결론은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00년 이후에도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 임금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

21) 문제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과 이를 둘러싼 논쟁점들에 관해서는 이강국(2017)을 참조.

생산성을 사용하면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또한 기준 연도 설정과 관련된 논점을 제시하고 외환위기 이후 임금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노동 생산성과 하위 90% 노동자의 평균임금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문제는 국민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자영업의 소득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서 자영업의 소득을 적절히 보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정방식들을 소개하고 1997년 이후 한국에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결국 한국경제에서는 1997년 이후 노동생산성-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고 따라서 노동 소득분배율이 하락했던 것이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박정수(2019)의 문제 제기는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문제를 분석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 문제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의 논쟁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의 지적대로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자영업 소득의 적절한 처리에 기초하여 더욱 정확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에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하락의 원인 그리고 그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1. 김유선, 『한국의 노동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pp.1-94.
2. \_\_\_\_\_,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제108호, 2019, pp.1-7.
3.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17, pp.1-43.
4. 이병희,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 pp.25-42.
5. 박정수,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1호, 2019, pp.81-112.
6. 전수민·주상영,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4호, 2015, pp.35-76.
7. \_\_\_\_\_, “한국의 기능적 분배와 총수요: 단일방정식 접근,” 『사회경제평론』, 제51호, 2016, pp.1-25.
8. 정상준, “임금주도 수요체제와 가계부채: 한국경제의 SVAR 분석,” 『사회경제평론』, 제52호, 2017, pp.153-186.

9. 주상영 · 전수민, “한국 경제의 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통계해석 논란에 대한 견해,” 서울 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2019, pp. 1-15.
10.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2019, pp. 1-29.
11. 홍민기, “최상위 임금 비중의 장기 추세 (1958-2013),” 『산업노동연구』, 제21권 제1호, 2015, pp. 191-220.
12. 홍장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금주도 성장모델의 적용 가능성,” 『사회경제평론』, 제43호, 2014a, pp. 101-138.
13. ———,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제20권 제2호, 2014b, pp. 67-97.
14. Acemoglu, D. and K. Restrepo, “Automation and New Tasks: How Technology Displaces and Reinstates Labor,” NBER Working Paper, No. 25684, 2019, pp. 1-31.
15. Autor, D., D. Dorn, L. Katz, C. Patterson and J. V. Reenen, “Concentrating on the Fall of the Labor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107, No. 5, 2017, pp. 180-185.
16. Barkai, S., “Declining Labor and Capital Shares,” Stilger Center Working Paper Series, No. 2, 2016, pp. 1-57.
17. Bivens, J. and L. Mishel,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Divergence Between Productivity and a Typical Worker’s Pay,” EPI Briefing Paper #406, 2015, pp. 1-30.
18. Blanchard, O. and F. Giavazzi, “Macroeconomic Effects of Regulation and Deregulation in Goods and Labor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3, 2003, pp. 879-907.
19. Bosworth, B. and G. I. Perry, “Productivity and Real Wages: Is There a Puzzl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Spring 1994, 1994, pp. 317-335.
20. Bridgman, B., “Is Labor’s Loss Capital’s Gain? Gross Versus Net Labor Shares,” *Macroeconomic Dynamics*, Vol. 22, No. 8, 2018, pp. 1-18.
21. Chen, P., L. Karaborbounis, and B. Neiman, “The Global Rise of Corporate Savi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89(c), 2017, pp. 1-19.
22. Cho, T., S. Hwang and P. Schreyer, “Has the Labour Share Decline? It Depend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2017/01, 2017, pp. 1-56.
23. Dao, M. C., M. Das, Z. Koczan and W. Lian, “Why is Labor Receiving a Smaller Share of Global Income?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IMF Working Papers, WP/17/169, 2017, pp. 1-72.
24. Elsby, M. W., B. Hobijn and A. Sahin, “The Decline of the U.S. Labor Shar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Fall 2013, 2013, pp. 1-52.
25. Gollin, D.,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0, No. 2, 2002, pp. 458-474.
26. Gomme, P. and P. Rupert, “Measuring Labor’s Share of Income,”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Policy Discussion Papers, No. 7, 2004, pp. 1-10.
27. Guerriero, M., “The Labor Share of Income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a Panel Dataset,”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920, 2019, pp. 1-35.
28.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lobal Wage Report 2010/11: Wage Policies in*

- Times of Crisis*, 2010, pp.1-122.
29. ILO-OECD, *The Labour Share in G20 Economies*, Report prepared for the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2015, pp.1-22.
  30. Karabarbounis, L. and B. Neiman,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9, No. 1, 2014, pp.61-103.
  31. Kristal, T., "Good Times, Bad Times: Postwar Labor's Share of National Income in Capitalist Democrac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 No. 5, 2010, pp.729-763.
  32. Lawrence, R. Z., "Does Productivity Still Determine Worker Compensa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vidence," in *The US Labor market: Questions and Challenges for Public Policy*, ed. by Strain, M. 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ress, 2016, pp.42-62.
  33. Lee, K-K., "Piketty'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riticisms and Debat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11, pp.151-170.
  34. Piketty, T., *The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Translated by Goldhammer, A., 2014, pp.1-696.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역, 이강국 감수, 글항아리, 2014.
  35. \_\_\_\_\_, "Toward a Reconciliation between Economics and Social Sciences," in Boushey, H., DeLong, J. B., and M. Steinbaum eds., *After Piketty: The Agenda for Economics and In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36. Piketty, T., and G. Zucman,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9, No. 3, pp.1255-1310.
  37. Rognile, M., "Deciphering the Fall and Rise in the Net Capital Shar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Conference, 2015. pp.1-50.
  38. Stansbury, A. and L. H. Summers, "Productivity and Pay: Is the Link Broken?" PIIE Working Paper 18-5, 2018, pp.1-51.
  39. Stiglitz, J., "The Origin of Inequality, and Policies to Contain It," *National Tax Journal*, Vol. 68, No. 2, 2015, pp.425-448.
  40. Stockhammer, E., "Why Have Wage Shares Fallen? A Pane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35, ILO, 2013, pp.1-52.
  41. Schwellnus, C., M. Pak, P-A. Pionniere, and E. Crivellaro, "Labour Share Development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Role of Technological Progress, Globalisation and "Winner-Takes-Most" Dynamic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ECO/WKP (2018) 51, OECD, 2018, pp.1-58.

## Labor Productivity, Wage and the Labor Income Share in the Korean Economy

Kang-Kook Lee\*

###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empirical analysis to criticize Park(2019)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and wage in Korea after 2000. He argues that former studies that reported the large productivity-wage gap in Korea were wrong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statistics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price indices.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his conclusion is not correct because it uses problematic wage data that do not cover all workers in the whol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finds that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nominal gross labor productivity and nominal wage for the 2000-2017 period, using data from national accounts. It also reports there was a gap between net productivity and wage though it was relatively smaller. This suggests that the growth of wage was lower than that of labor productivity after 1997, which led to the fall of the adjusted labor income share. In addition, after examining debates about the measurement of the labor income share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we should rigorously analyze the labor income share.

**Key Words:** labor productivity, wage, labor income share

**JEL Classification:** D33, E24, E25

---

*Received: June 17, 2019. Revised: July 10, 2019. Accepted: July 17, 2019.*

\* Professor, College of Economics, Ritsumeikan University, 1-1-1, Noji-higashi, Kusatsu shi, Shiga ken, Japan, Visiting Scholar,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Phone: +81-77-561-5041, e-mail: leekk@ec.ritsumei.ac.jp